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5년 연장 발의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30일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7.8%가 세금감면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꼽은 코로나 세법…
고용 및 R&D 세액공제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최근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확정된 정부 세법개정에 대한 기업 당사자들의 평가다.

설문에서는 이번 개정세법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은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총 65%는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청년 고용에 따른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관심 많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였다. 응답자의 38%가 꼽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20~40%, 시설투자 비용의 3~1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30~50%, 시설투자의 6~16%가 가능하다.

다만, 응답자의 39%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요건이 복잡해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세무조사 시에 추징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두고 심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가산세 리스크 등을 해소해 주고 있다.

유류세 20→30% 인하 확대 검토…
휘발유값 얼마나 내려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류세 인하 검토 방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 급등에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뛰면서 국내 기름값이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인하된다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 내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가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는 최대30%까지 가능하다.